

전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확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한해 인정 당초 10일 이내→34일... 학부모들 의견 반영

전북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서 수업일수의 20%(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기존에는 10일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시행 일수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되면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시행 희망일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 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

부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확대에 따라 장기간 학교를 나오지 않거나 학교 대신 개인과외 등 사교육 참여로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외학습 인정 기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특허 전담사무소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특허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특허법인다해와 한림특허법률사무소를 전담 특허 사무소로 지정하고, 교내 연구자들의 신규 발명신고 안내 및 접수부터 특허 출원 및 연차유지 등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전담 관리한다.

전북대가 대학 내에 전담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그간 교내 연구자들이 특허에 대한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리 업무 체계 등도 일원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 내 연구자들의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부터 활용단계까지 지원하고 우수한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특허사무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특허 관리가 가능하고, 업무 지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산학협력단 RnBI전략센터에 전담 특허사무소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재영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은 "전담 특허사무소를 보유하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대학의 우수 특허와 연계한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 특허 출원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가 높아지고, 각종 기술이전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후속 연계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비전대학교(홍순직 총장)는 26일 창의융합 멀티미디어실에서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취업 명문 자부심 쥐 감사”

전주비전대,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에 감사패 수여

전주비전대학교(홍순직 총장)는 26일 창의융합 멀티미디어실에서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주)약손명가는 7년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대상을 수상한 글로벌 에스테틱 브랜드로 지난 2014년 전주비전대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은영 학과장(미용건강과)은 (주)약손명가의 체계적인 전문 피부미용 케어 시스템과 진심어린 정성으

로 미용건강과 학생들이 지방대학교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피부미용 전문가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김현숙 대표를 비롯해 약손명가에 근무하는 제자들이 학교 후배들에게 특강과 멘토가 되어 취업 명문의 자부심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김현숙 대표의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특강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주)약손명가는 고객들에게 건강한 마음과 '덕'을 서비스

하는 '인간적인 기업'이라고 소개하며 "코로나19여파로 대학과 기업들은 모두 지금껏 겪어보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학생들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자세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대학 이론 및 실습 수업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약손명가와 같은 기업의 현장맞춤형 교육에 사회가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로 인해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해 피부미용 전문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중소·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판로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북도교육청, 지난해 증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1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이행으로 공공조달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및 배려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기업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공공구매제도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추진한다.

올해 공공구매 추진 비율은 중소기업 제품 91%, 여성기업제품 물품 9.4%·공사 9.8%·용역 11.3% 장애인 기업제품 2.3%, 사회적 기업제품

3.6% 녹색제품 88%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의무구매 비율보다 상향 책정됐다. 도교육청은 공공기관 법정 의무구매 목표 비율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계약전문성 향상과 공공구매 제도 이행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공공구매 제도 안내 및 업체 상담과 홍보를 수시로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제품 등 약자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공구매에 사회적 가치 구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증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율 1.9%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직속기관 명칭은 전북교육감 권한”

전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입법발의 조례안 폐기 촉구

전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용 이하 공노)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입법발의의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집행석 도의원이 언론을 통해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73%가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입법 발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고 명칭 인지도가 낮으며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혼란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연구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수련원, 전북학생해안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명칭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어 도청 소속 기관인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인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또는 도민의 의견과 그 지역의 지명을 따라 선정하기도 하며, 그 고장의 유고한 역사의 지명을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마한교육문화회관의 기관 명칭 유래를 살펴보면 익산시(구,익산군)는 본래 마한국이였으며 금마는 마한의 도읍지였다. 역사를 풀이해 볼 때, 마한의 지명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사료에서 익산과 마한을 연관 짓고 있으며 조선시대 '응제시주', '동사강목' 등의 문헌 기록에 기록돼 있으며, 마한의 중심지가 익산 금마로 기록돼 있고 익산 금마의 고도리(古高麗里)는 지명은 옛도읍지라 칭했다. 현재 마한교육문화회관은 2000년 마한학생종합회관으로 개관, 2007년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마한교육문화회관 합영분관은 1990년 익산공공도서관으로 개관, 2004년 마한학생종합회관 익산분관, 2007년 마한교육문화회관 익산분관, 2011년 마한교육문화회관 합영분관은 개관 이래 수십년 동안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노 관계자는 "진행석 도의원 주장대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 혼란 해소와 기관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사하면 전북교육감 권한과 도민이 참여하고 공모한 명칭은 보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는 단지 여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학생과 도민들이 수십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기관 명칭을 수역원의 예산을 들여 변경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해 옳은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